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깜깜이 증권거래세 귀착... 개인·기관별 비중 파악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 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 개인들에게 전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향후 세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지방특화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논의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필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각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시간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세금감면 비중 커졌다... 1조2604억원 지원

최근 전체 법인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감면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2조17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감면은 62.5%인 1조260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67.8%, 2017년 56.0%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8년 60.7%, 2019년 62.5%로 다시 60%대로 높아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891억원, 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09억원, 6.4%)이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기타 감면은 1369억원(10.8%)에 달했다.